

주제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베를린의 주택 사회화 운동에서 배운다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 정치는 점점 더 시장의 강제에 복종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긴급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작금의 도시들은 주거권과 같은 도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정치적인 혁신에 기여하고 있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 현재의 도시정치는 대안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내며 민주주의적인 공동 형성(mitgestalten)을 허용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어떤 도시정치는 주거 소수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한다.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법적, 사회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부부가 될 수 없는 여러 집단을 배제하는 정치를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하나의 아파트단지를 중산층 거주 분양주택과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으로 나누고, 후자에게 가장 시끄럽고 편익이 떨어지는 구역을 배당한 것도 도시정치이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공간의 양극화로 구현되는 양상이다. 바야흐로 공동체로서의 도시의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맞서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의 통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 혹은 도시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심성에 대한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의 주요 내용으로 포섭했다.

“도시의 삶은 만남, 차이들의 대면, 도시 내에서 공존하는 삶의 방식들, ‘패턴들’의 상호적 인식 및 승인(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대결을 포함하여)을 전제로 한다.” “‘도시적인 것’이 만남의 장소가 되고, 사용가치의 우선성을 보장하고, 제반 재화 중 최고의 재화의 지위로 고양된 시간을 기입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 형태학적 기초와 그 실제적·감각적 현실을 유지하는 한, ‘도시’(das städtische Gewebe)가 시골을 잠식하고, 농민 생활 가운데 살아남은 것을 옥죄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나 작금의 도시정치는 “만남의 정치”의 장(場)을 닫는데 더 많은 정력을 쏟고 있다. ‘세계로 열린 - 그러나 정확히는 세계의 자본에 열린 - 도시’라는 헛된 구호 아래.

‘만남의 광장’에서 물러난 도시민들은 자신들만의 gated community, 소유권 주택=자가주택에 침잠한다. 소유권은 내 것과 네 것을 구획한다. 구획은 배제를 낳는다. 배제의 실천은 조닝(Zoning)을 통해서 완성된다. 미국식 모델이다. 금융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공간과 도시구조의 영역에서도 미국식 모델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이에 맞서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며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현재 베를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 사회화 운동이 도시정치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오래된 미래’가 되면 좋겠다.

베를린은 도시민들이 중심성에 대한 권리를 위해 쉬지 않고 싸워온 도시이다. 투기자들이 비워둔 빈집과 거리에서의 투쟁은 소유권 ‘독재’와 관료주의적 도시개발을 향했다. 터키계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 주민, 기성세대와 불화한 청소년들과 가난한 노인들이 이 투쟁에 연대했고, 도시의 ‘빈’ 공간을 전유(專有)하며 살았다—즉, ‘도시 생활’을 위한 자유공간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 통일 이후 상황은 변했다. 원주민들은 도심=도시 중심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물리적 축출은 도시정치의 모든 수준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베를린의 도시민들이 ‘중심성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시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주택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활발했던 주택점거 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주택점거 투쟁은 도시공간의 본성인 중심성, 즉

사회의 부를 공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투쟁의 전통 위에서 베를린 지역 정치의 제도들(근린 보호지구, 선매권)이 작동했고, 이들 제도의 빈틈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주택 사회화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